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현황과 특징*

김주영**

이 연구는 2021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분석해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결과 총 155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특징을 설립시기와 운영주체, 주요활동, 국내외 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설립시기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의 흐름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의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단체 설립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운영주체는 높은 종교단체 비중과 그 영향력을 중심으로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요활동은 상담과 교육, 의료지원과 쉼터 운영, 문화활동과 국가별 공동체 지원, 결혼이주여성 지원활동 병행, 기타활동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국내협력은 연대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를 중심으로 활동을 파악하였으며, 국제협력은 참여하는 소수 단체들의 지향과 활동상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네 가지 함의를 도출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현재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시민사회단체, 한국 시민사회

* 이 글은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정책연구보고서 『한국 시민사회의 동남아시아연대운동: 노동 및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2021) 중 “이주노동 분야 한국 시민사회의 동남아연대운동”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유익한 조언으로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준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1080989).

**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전임연구원

1. 들어가며

1980년대 후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급증과 정부 정책 차원의 미진한 대응은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의 적극적인 조력자로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갑작스러운 유입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불합리한 처우의 문제로 이어졌다. 정책 도입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1991년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1993년 산업연수생제도, 2004년의 고용허가제를 거치면서 연수생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주에 의한 폭력,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한 장시간 노동, 열악한 거주환경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일했던 이주노동자들이 농업, 어업, 축산업, 서비스업 분야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이슈도 발생했다. 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국면에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초과체류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겼다. 이주노동자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자 일부 지방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한 일도 있었다. 인권위가 이를 차별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시정을 권고해 철회되기는 했지만, 예외적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라고 비판하고, 인권의 원칙이 감염병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응하였다.¹⁾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련의 정책변화 과정과 새로운 이슈의 등장 속

1) <코로나19 이주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이주인권단체 의견서> 및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의견서> 내용 참고.

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역동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러한 개입이 만들어 낸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의 활동이 한국 사회운동의 새로운 아시아 연대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받기도 했다(전제성 2006: 67-69). 이주노동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천과 교육”의 주체로 이들을 설정하려는 실험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시민사회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소모임을 만들도록 하고, 교육과정에 공동교사로 참여하게 하며, 자국의 언어로 노동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게 하는 등의 활동을 기획했다.

1990년대 본격화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이제 30년의 역사에 접어들었다. 이 시점에서 새로운 아시아 연대로 언급되었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2021년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4년 시행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뿐만 아니라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며,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을 마련하였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외국인 정책이 ‘다문화’의 이름을 걸고 전개되기 시작한 것도 2000년대 후반이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단체들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의 활동을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이전에도 물론 있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설동훈 2002; 2003a) 단체의 지역별 분포, 인력 구성, 인력의 특성, 이주노동자 국적별·직종별 지원단체의 분포, 주요활동 분야, 교육·선교활동 내용, 수입과 지출 내역까지 꼼꼼하게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당시에는 종교계 단체가 84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법률서비스단체가 6개로 총 90개 단체가 있었다. 2003년에는 155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지연 2004). 2000년에 비

해 약 1.7배 늘어난 수치이다. 2006년 연구는 부록에 단체 목록 145개를 제시한 바 있다(설동훈 이란주 2006). 3년 동안 약간 감소했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이 외에도 한국다문화학회(2010)의 연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외국인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록을 133개로 조사하였다. 수치로만 보면 지원단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현황을 조사해, 이 중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기존의 연구가 오래되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2002-2003년 연구를 제외하면 단체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2006년의 연구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로 제시하였다. 2010년에 이루어진 연구는 '다문화'를 키워드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현황과 특징을 현재적 시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2021년 기준으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조사하고, 활동의 유형과 내용을 분석해 특징과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단체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설립된 것에 국한하며,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설립해서 직접 혹은 위탁운영하는 기관은 제외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방정부에서도 외국인노동자 센터를 자체적으로 설립해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경우도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2. 한국 시민사회외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운동과 복지, 대상화와 주체의 문제를 넘어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내부적인 화합, 갈등, 분열을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응시하는 시각은 다양한 주체의 서로 다른 지향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으며, 이러한 분화는 2000년대에 들어서 뚜렷해졌다.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이주노동자 당사자 중심의 농성을 거치며 이루어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산업연수생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한국인 활동가들의 본격적인 개입을 야기했다. 1995년 결성된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는 2000년대 이전까지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대표했으나, 이후 여러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대중투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1998-1999년 사이에는 '지원'이 중심이 된 활동을 비판하며 외노협을 나온 활동가들이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 실현을 위한 투쟁본부'(이하 이노투본)를 구성하면서 분화는 가속화되었다(이주노동희망센터 2021: 16-18).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거의 1년간 이어진 2003-2004년의 명동성당 농성에서도 초기에는 노동운동 진영과 외노협을 비롯한 단체가 공동농성단을 구성했으나 시각의 차이로 인해 하루 만에 와해되고 말았다(이선옥 2005: 77).

이후 오랜 시간 양측은 서로를 비판해왔다. 지원단체는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 문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짜사랑'에 불과한 연대에 대한 요구를 언급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활동을 노동운동으로 보지 않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불만을 표시했다(이란주 노대명 2000: 307-308).²⁾ 외노협이 노동허가제를 주장하다 산업연수생제도보다는 진

일보하다는 판단으로 고용허가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이러한 균열은 더욱 공고해졌다.³⁾ 노동운동 쪽에서는 지원단체가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대한다고 비판하며, 이주노동자를 주체로 내세우지 않는 활동가 중심의 지원활동이 정부 정책의 지향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레이 2004: 116-118).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 문제가 지원단체의 활동과 노동운동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선으로 작동한 것이다.

그렇지만 노동운동의 비판처럼 노동조합 활동이 이주노동자의 주체성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단체의 활동이 이들을 대상화했다는 이분화된 평가는 타당하지 못하다. 2003년 민주노총과 결합한 이주노동자의 명동성당 농성단에서 한국인 활동가가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는 자신들의 의사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회상했다(이선옥 2005: 110-115). 한편, 지원단체의 활동이 이주노동자를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이었다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 지원단체의 활동을 새로운 아시아 연대로 해석한 연구는 '보호와 교육의 대상'에서 '실천과 교육의 주체'로 이주노동자를 응시하고자 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전제성 2006: 6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원단체의 활동이 이주노동자의 대상화로 귀결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주체를 규정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운동과 복지, 이주노동자의 주체성과 활동가 중심의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포착하기는 더욱더 어렵다. 여기에 종교단체

2) 여기에서 지원단체는 노동운동 단체 이외의 주체를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 지원활동은 지원단체에 의한 것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노동운동 역시 지원활동의 한 축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3) 외노협 관계자들은 고용허가제가 당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했으며, 노동허가제는 차후의 과제로 보았다. 이들이 고용허가제가 노동허가제보다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해서 수용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를 포함하면 논의는 더 복잡해진다.

활동가 입장에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유형을 분류한 박석운(2001)은 외노협과 구분되는 천주교와 개신교 단체의 활동을 서술한 바 있다. 종교단체를 운동적 성격을 가진 단체와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비교적 연대에 소극적이고, “심하게 말하면” 종교적 차원에서 선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대의 시초가 된 외노협의 구성원에 천주교와 개신교 계열의 단체가 다수 포진해 있던 것을 보면(설동훈 2003b: 264), 종교단체가 연대에 소홀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개신교는 선교를, 천주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나친 노동 정치운동을 지양했지만 운동적 성향을 지닌 일부 목회자들은 다른 지향을 드러내기도 했다(이정환 2003: 386-388). 노동운동에 오래 참여해온 한 목회자가 설립한 단체가 ‘노동운동 단체’로서 신앙을 중시하면서도 투쟁적 운동을 해온 것이 한 사례이다(한도현 2010).

이처럼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다양한 결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따라서 어떤 활동을 운동, 복지, 선교활동으로 구분하기에는 그 층위가 다소 복잡하다. 인권, 노동권, 시민권으로 분류해 각 단체의 지향점을 가르는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2003년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들은 운동에서 노동자의 정체성을 강조하다보니 개인의 인간적인 욕망과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놓치게 되었다(이선옥 2005: 115-118). 게다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 발생하는 위계와 차이가 ‘동지’의 이름으로 일원화 되면서, 내부적으로 젠더갈등이 나타나도 제대로 발언하지도 못했다(Ibid: 119-123). 노동자이면서도 동시에 한 사람의 고유한 인격체인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저마다 다른 여러 지향이 조화롭게 섞여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를 특정한 유

형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각자의 지향을 저마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운동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구조와 투쟁하는 것이나, 인권을 중시하며 노동자인 한 사람의 생활개선에 힘쓰는 것이나 모두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지향들이 조화롭게 지원활동에 녹아들 때 노동력이 아닌 사람으로서 온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가능하다.

3. 단체선정 방법과 기준

현황조사를 위해 우선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최근 목록을 찾아보았다. 설동훈과 이란주의 2006년 연구가 제시한 145개 단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곳들을 찾아보았으며, 이를 한국다문화학회의 2010년 연구에서 조사된 단체와 교차 확인하였다(설동훈·이란주 2006; 한국다문화학회 2010).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https://npas.mois.go.kr/>)에서 등록단체를 조회해 현황을 파악해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비영리법인 현황자료에서도 '이주'를 검색어로 해 몇몇 단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협력기관 현황을 정리해놓은 문서가 있어서 경기지역 단체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지사항의 '외국인 기관, 단체, 의료기관 안내'라는 게시글(2020.4.24.)에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협력기관이 NGO 74개소, 쉼터 31개소, 의료지원 사업 민간단체

19개소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었다.

이처럼 흩어져 있는 여러 기초자료들의 조각을 맞추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를 선별하였다. 이 연구에서 단체 선별 기준은 1)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 이주민 지원단체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나의 사업으로 수행하고, 3)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의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활동에 일부 참여하는 곳으로 한정하였다.

현재까지의 활동 여부 기준은 홈페이지가 있는 단체면 2021년에 올린 게시물이 존재할 경우 활동하는 것으로 보았다.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물이 없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현존하는 단체로 해석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보도자료나 다른 공식자료에 언급되어 있다면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소지역) 사업수행기관 목록에 있는 단체는 다른 경로를 통해 최근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도 포함했다. 이 사업에 신청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별도의 상담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상담/쉼터운영 수행 실적과 상담인력 보유 여부는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따라서 선정된 기관일 경우에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노동자 권리옹호를 위한 공동성명서에는 최근까지도 등장하지만 개별적으로 활동상을 파악할 수 없는 단체는 제외하였다.

단체를 파악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했다. 단체는 이름을 자주 변경했고, 서로 명칭이 다르더라도 그 뿌리를 따라가면 같은 기관인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하나의 단체가 여러 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천주교의 특정 교구에 속해있으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

는 더욱 구분이 모호했다.⁴⁾ 이들은 공동성명서나 단체 간 연대회의에 서도 종종 독립된 단체처럼 거론된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존재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확인된 시민사회단체는 총 155개이며, 제한적인 집계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수도 있다. 또한 교구와 그 안에 속한 단체를 독립적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양적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개, 경기·인천 64개, 광주·전라 20개, 대전·충청 15개, 대구·경북 12개, 부산·울산·경남 11개, 강원 1개, 제주 3개로 확인되었다(첨부한 <부록> 참고). 서울과 경기·인천에 94개의 단체가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25만 명 중 11만 명이 이곳에 체류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⁵⁾ 특히 안산, 부천, 시흥, 김포, 평택, 화성에는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의 단체가 눈에 띈다.

다른 지역의 단체 분포는 E-9비자 소지자 수와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단체는 광주·전라(20), 대전·세종·충청(15), 대구·경북(12), 부산·울산·경남(11) 순으로 존재한다. 이 중에서 부산·울산·경남의 E-9비자 소지자가 16.9%로 경기도 다음으로 비율이 높으며 대전·세종·충청은 14.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순히 비율상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청 순으로 단체가 많아야겠지만 그렇지 않다. 광주·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10.4%의 E-9비자 소지자가 있지만 가장 많은 단체

4) 예를 들어, 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국은 전북이주사목센터(전주),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 군산 군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세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이주사목센터가 익산과 군산의 회계 및 행정을 통합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각 단체는 별도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해당 지역에서 각각 고유하게 분담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전북이주사목센터는 이주민 가정과 자녀 중심의, 익산과 군산은 이주노동자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군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2010년,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은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5) 통계청의 「2020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2020.12.21.) 자료 참고

가 분포한다. 대구 경북은 이중에서 가장 낮은 9.2%를 차지하지만 가장 높은 부산·울산·경남보다 단체가 많다.

지역의 단체는 여전히 적지만 2000년 기준으로 연구된 자료를 보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2000년에는 수도권에만 66개(33.3%)의 단체가 집중되어 있었다(설동훈 2002: 5). 같은 연구를 보면, 2000년에는 대전(1), 충남(1), 충북(1), 부산(4), 경남(5), 대구(5), 경북(3), 광주(1), 전북(2)으로 지역에는 24개 단체만이 활동하고 있었다. 단체의 전반적인 수도 늘어났지만, 지역에 소재한 단체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4.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특징

이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특징을 설립시기와 운영주체, 주요활동, 국내외 협력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설립시기는 2021년 현재 활동하는 단체들의 시작점과 그 흐름을 개관해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⁶⁾ 운영주체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단체 중 종교적 성격을 가진 곳들이 많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설립시기와 운영주체는 별개로 설명하기 어려워 함께 서술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특히 초기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주로 조직된 바, 설립시기와 운영주체를 병합해서 서술하는 것이 활동 전반을

6) 문제는 설립시기가 미상인 단체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27.1%의 단체가 설립시기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따라서 본문의 분석내용은 나머지 72.9%의 단체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설립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분석을 시도해볼만하다고 보았다.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주요활동은 현재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함으로써 활동의 상승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협력을 통해 개별 단체의 주요활동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 설립시기와 운영주체

조사된 단체의 설립시기를 1990년 이전부터 2020년대까지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대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1990년대가 16.2%, 2010년대가 13.6%의 순으로 설립단체가 많다.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990년대 이전은 1983년 활동을 시작한 <익산 성요셉노동자의집>과 <새중앙교회>, 1988년에 출발한 <노동건강연대>가 있다. 그렇지만 국내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대체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은 이주노동자와 맞닿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990년대 이전에 설립된 단체는 기존에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이주노동자로 영역을 확장하거나 전환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주교 전주교구 이주사목국의 연혁에 따르면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은 2002년 익산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로 이주노동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시기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시작한 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표 1〉 설립시기별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수

설립년도	단체 수(%)
1990년 이전	3개(1.9%)
1990년대	25개(16.2%)
2000년대	63개(40.6%)
2010년대	21개(13.6%)
2020년대	1개(0.6%)
미상	42개(27.1%)

1980년대 말부터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했지만 시민사회단체의 대응은 1990년대 초반부터 감지된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시행된 1991년, 특히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된 1993년 이후가 본격적인 태동기로 보인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단체는 <엠마우스 신앙공동체>(1991)였다. 이후 1992년 천주교인천교구와 서울대교구의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빠르게 활동을 시작했다. <아시아의 창>이 1993년 <안양전진상복지관>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 상담을 시작한 것도 비교적 이른 대응이었다. 이주노동자가 밀집한 경기도에는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단체가 많다.

〈표 2〉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 운영주체

운영주체		단체 수(%)
종교	천주교	34개(22%)
	개신교	40개(25.8%)
	불교	4개(2.6%)
	원불교	1개(0.6%)
종교 외 시민사회		76개(49%)

1990년대 초반에 설립된 단체의 공통점은 대체로 기존 활동기반이 있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했다는 것이다. 그 기반이 대부분 종교단체의 활동이었다는 점은 또 하나의 공통점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 운동이 종교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단체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초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인 노동자와 함께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종교단체가 이주노동자를 만나면서 이들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79개 단체가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초기 흐름을 잘 보여준다. 이 중에서 개신교가 25.8%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천주교가 22%를 차지한다.

천주교는 지역교구 차원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는 반면, 개신교는 교파보다는 개별 교회 단위로 활동을 조직하는 경향을 보인다. 불교와 원불교는 천주교와 개신교에 비해서 수적으로는 현저히 적게 나타난다.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 초기에 밀접하게 관련된 종교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낮은 비율을 이해해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 불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 같은 종교적 배경을 기본으로 연

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보인다(이상지 2014: 47). 종교단체 내부의 다양성은 다소 역동적이다. <부천이주민지원센터(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은 2000년대 자료에 따르면, 미얀마, 네팔, 스리랑카처럼 불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찾았지만 정작 사무국장은 “종교와 무관하게 상담활동을 합니다”라며 선을 그었다(이란주 노대명 2000: 303). 석왕사에서 재정지원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종교적 목적을 중시하며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를 선교의 관점에서만 이주노동자 활동에 관여하는 주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설립시기로 돌아가 보자. 1990년대 후반에는 지방에도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충북이주민노동지원센터>(1996), <부산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1996),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1997),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1998),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1996) 등 지방에서의 활동이 이어졌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국단위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수도권의 노동 수요에 부응했던 이주노동자들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확산의 배경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이정환 2003: 384).

2000년대는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를 기점으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전환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에 대한 견해 차이로 기존 단체가 분화되고 다른 지향을 드러내면서 1990년에 비해 활동이 세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외노협을 구성했던 단체가 분화되고,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단체가 생겨났으며, 변호사 중심의 단체가 구성되고,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이주노동희망센터 2021: 22-36). 이주여성 노동자의 증가와 결혼이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라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단체가 태동한 것이다. 2000년 결성된 이노투본도 이러한 분화 양

상과 연계해 이해 가능하다.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 중심의 노동조합 운동의 출발점과도 같다. 이노투본에서 시작한 활동은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거치면서 오늘날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이주노동자센터>도 이 시기에 설립되어 노동조합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2000년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흐름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 당사자가 주체가 된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주민방송MWTV>(2004)가 그 사례로,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1년 동안 전개되었던 농성에 참여했던 이주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의 목소리를 드러내고자 설립하였다(정성신 2012: 45). 2005년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고 2015년 합법노조가 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도 위원장이 이주노동자 당사자이다.

2010년대에 설립된 단체는 이전에 비해 종교단체의 비중이 낮은 특징이 있다. 시기별로 설립된 단체 중 종교단체의 비중은 1990년대 64.3%, 2000년대 47.5%, 2010년대는 38.1%로 점차 줄어들었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설립단체 수도 감소했다. 1990년대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본격적으로 종교 이외의 시민사회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양적으로 정점을 찍었다면, 2010년대에는 그 흐름이 다소 둔화된 경향을 보인다. 종교단체의 감소 이유로는, 종교단체 외에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꼽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단체만이 아니라 그 외의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관심을 가진 주체들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단체의 수는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전체적으로 설립단체가 줄어든 이유를 명확하

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2000년대 중반부터 고용노동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설립한 기관이 기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수행하던 지원 활동을 안정적인 예산기반으로 운영하게 된 것을 그 배경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활동의 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는 서울의 <한국센터>(2004), <의정부센터>(2007), <김해센터>(2008), <창원센터>(2010), <인천센터>(2010), <대구센터>(2010), <천안센터>(2010), <양산센터>(2018), <안산외국인력상담센터>(2011) 등이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정부에서 200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주민,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을 하나 둘 수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방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에는 2000년대에 이어 이주노동자 당사자 활동이 이루어졌다. <한국이주민의집(김해이주민의집)>(2013)은 네팔 출신의 1세대 이주노동자가 설립한 단체이다. 2000년대에 이주노동자 당사자의 노동조합과 미디어활동이 싹텄지만, 그 이후에는 당사자가 대표가 된 단체 설립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이주민의집> 대표는 신학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이후 단체를 설립했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서 당사자의 주체성 문제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언제나 화두였다. 하지만 단기간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단계에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에 설립된 한 단체의 지원활동은 이전 활동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지점을 드러낸다. <이주인권콘텐츠랩 액트-잇(ACT-IT)>(이하 액트잇)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일했던 활동가가 <서울시NPO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만든 비영리스타트업이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목표로 미디어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월간리크루트 2021). 이 단체에서 눈여겨볼 점은 기존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시민대

상의 운동으로 관점을 옮긴 청년 대표가 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주노동자의 목소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통로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에도 <이주민방송MWTV>(2004)가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액트잇이 보여주는 차이는 젊은 시민사회 활동가의 지향을 드러낸다는 데 있다. 하나의 사례로 이제 30여 년의 역사에 접어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세대교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세대가 스스로 단체설립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단체가 싹을 틔운 1990년대는 중반에 접어들면서 역동적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으로 한국사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산업연수생 신분이었던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 활동가들이 참여했던 1994년과 1995년 두 차례의 농성은 당시 활발했던 시민사회 활동과 맞물려 이후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침체와 정책 변화를 지연시키기도 했지만, 2000년대 고용허가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의제를 다양화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와 2010년대까지 이어진 정부 지원 기관의 설립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설립된 시민사회단체의 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연구는 단체 설립 추이를 유입되는 이주노동자 수의 증감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한 바 있다(설동훈 2003a: 87).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주체가 시민사회단체였던 2000년까지는 이러한 분석이 유의미할 수 있지만,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 지원 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다른 변수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시기의 변화된 상황과 설립 및 운영주체의 추이를 결합해 이해를 시도하였다.

2) 주요활동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이주노동자 대상의 서비스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거듭나게 하려는 지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문헌조사에 기초한 이 연구의 방법으로 인해 두드러지게 관찰되지는 않는다. 활동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주노동자가 단체의 상담원이나 상근으로 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지만,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당사자의 참여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히는 것이 현실이다(이주노동희망센터 2021: 84-87). 이주노동자가 단기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임시적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때문에 단체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잠시 동안의 불편함과 권리침해를 해소해주는 데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활동에 대한 이전 연구와 현재의 현황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설동훈(2003: 90-95)은 1992-2002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주요활동을 상담·복지·교육, 공동체 지원, 권리 옹호, 외국인력제도 개선의 네 가지로 구분해 살펴본 바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력제도 개선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많았던 1990년대 초반과 2001년의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에 지원활동을 하던 시민사회단체는 이주노동자 체류의 법적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상담·복지·교육, 공동체 지원, 권리 옹호도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 설동훈의 구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기에서는 이 구분을 수용하는 동시에 변화된 부분을 살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방향을 드러내본다.

〈표 3〉 주요활동(중복포함)

주요활동	단체 수(%)
상담	117개(75.5%)
교육	84개(54.2%)
의료지원	65개(42%)
문화활동 지원	56개(36.1%)
컴퓨터운영	52개(33.5%)
여성지원(이주노동자, 결혼이주)	43개(27.7%)
국가별 공동체 지원	24개(15.5%)
신앙생활 및 선교	24개(15.5%)
자녀지원	14개(9%)
기타(이·미용 봉사, 장례)	8개(5.2%)
법률지원	5개(3.2%)
미디어 활동	4개(2.6%)
노동조합	3개(1.9%)

(1) 상담과 교육활동

75.5%를 차지하는 대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상담은 임금체불, 산재, 출입국, 의료, 생활, 인권침해, 법률, 퇴직금, 직장이동, 부당해고, 비인권적 구타와 욕설, 행정, 교육, 민·형사 사건, 보험, 직장 적응, 노동조합 결성, 사망사고 등에 관해 주로 이루어진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적으로 상담을 책임져야만 했던 초기에는 활동의 중요성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9개소 운영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상담활동을 나누어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소지역센터 36개소에 이 연구에서 현황을 파악한 단체 21개가 포함되어 있다. 일부 단체가 고용노

동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지역센터에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방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도 있다. 대부분 민간단체가 위탁해 운영하는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소지역센터 사업에 지원해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담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행하는 기관이 양적으로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남아있다.

활동 중 54.2%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활동은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 대비, 한국사회 이해(문화, 생활), 노동법, 기술, 귀환정착, 귀국준비 등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많은 단체가 진행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단체들도 있다. 법무부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이전에는 없었던 예산지원이 생겨나면서 교육과정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노동자의 이주목적과 생활적응에 충실한 교육이 대부분이지만 단체마다 방점을 두는 교육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산업안전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통안전, 직무능력 향상, 바리스타, 통번역, 이미지, 요리, 컴퓨터, 지식정보, 세계문화, 정서 지원, 평화소통/문화인권, 성폭력 예방, 미디어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한국인을 위한 시민교육도 종종 이루어진다.

(2) 의료지원과 쉼터운영

42%의 단체가 진행하는 의료지원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단체는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의료진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무료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이주노동자와 이어주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의 외래 진료나 입·퇴원에 동행해 도움을 제공하는 단체도 있다. <지구촌사랑나눔>은 2004년부터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 건강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라파엘클리닉>, <희망의친구들>, <노동건강연대>, <선한의료포럼>,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같은 단체는 이주노동자를 포괄하는 이주민의 건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생활·노동환경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과 달리, 의료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단체가 있다는 점은 그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자라는 큰 틀에서 건강문제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주목하며, <선한의료포럼>은 소외계층의 의료문제를 논하면서 이주노동자를 포괄한다.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지만,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는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의 주요활동 영역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제조업 공단의 이주노동자는 직장가입을 하지만, 농업부문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대부분이어서 지역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우춘희 2020: 90).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이주노동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는 점에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을 상회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렇다고 병원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제약이 많은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료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쉼터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치료에 매진하기도 한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52개 단체(33.5%)에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한국 최초의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해왔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성남이주민센터>도 여성과 남성 쉼터를 구분해 제공하며, <함께하는 이웃>과 <안산이주민센터>에도 이주여성 쉼터가 있다. 대부분의 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성별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여성을 명시한 단체가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를 지원하는 단체의 경우 쉼터, 자녀교육, 보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민간교류협회>, <나섬공동체>, <충북이주민노동자지원센터>의 자녀교육, <아시아의 창>과 <천주교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의 한부모 여성 이주노동자 아이를 위한 어린이집, <이주민연대 살롬의집>의 청소년 교육이 그 사례이다. 최근에는 쉼터 운영도 지방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위탁해 운영하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다.⁷⁾

(3) 문화활동과 국가별 공동체 지원

36.1%의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문화활동은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낯선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노동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주를 이룬다. 체육대회, 문화교류, 한국문화체험, 영화제, 명절 행사, 노래경진대회, 다문화 축제, 수련회, 역사문화탐방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특하게도 이주노동자 영상공부방에서 시작한 <지구인의 정류장>은 문화활동 차원에서 생활일기 비디오 만들기, 라디오/연극교실을 진행한 바 있다. <AMC Factory>, <이주민

7) 강정원. "전주 삼천동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들어선다." 「전북일보」. 2021. 7. 13.

방송MWTV>도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이주민 예술 미디어 운동을 표방하고 있어서 이색적이다. 특히 <이주민방송MWTV>는 이주노동자가 미디어 활동가로 변화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라디오,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주장하는 주체적 운동으로 부상했다(정성신 2012). <이주인권콘텐츠랩 액트-잇(ACT-IT)>은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협업해 어업 이주노동자들이 군산 개야도에 남긴 그들의 이름을 추적하는 짧은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미디어 활동은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조명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이주민 스스로, 한국인 활동가가 한국시민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15.5%의 단체가 지원하는 국가별 공동체 활동은 1992-2002년 사이와는 결이 달라 보인다. 이전에는 빈번한 일은 아니었지만 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공동체 조직 구성을 지원해 노동조합과 연결해주기도 했다(설동훈 2003a: 92). 그렇지만 현재 조사된 단체의 국가별 공동체 활동은 친목을 기반으로 한 자조모임의 성격이 강해 보인다. 연구방법의 한계로 인해 공동체 내부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앞선 연구들은 약화된 공동체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이주노동자 당사자 운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단체의 지원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비판이(김현주 2005: 82-83) 그렇다. 시간이 지난 오늘날, 이러한 상황이 달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오히려, 2005년을 기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해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고 정부 지원사업도 늘어나면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이주민 지원활동이 운동성을 잃어간다는 비판이(한국다문화학회 2010: 21-25) 앞선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운동성의 과거 기준이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정부와 대립하면서 제도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노동의 국제이주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운동성을 갈음하는 기준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일상의 정치화가 운동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국가별 공동체를 지원해서 이주노동자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들의 노동환경과 임금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고 일상을 공유하는 경험은 소소하지만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일상의 정치를 싹틔우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연구가 지원단체의 운동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활동이 가진 잠재적 힘을 간과하기에는 그 다양성의 폭이 크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4) 결혼이주여성 지원활동 병행

이 글에서 조사한 155개 단체 중 27.7%를 차지하는 43개 단체가 여성지원의 큰 틀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결혼이주여성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단체명에 노동자나 근로자가 포함될 경우 이주노동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이주민' 혹은 '외국인 주민'으로 포괄할 경우 결혼이주여성, 드물지만 난민과 유학생으로도 활동 영역이 확장되기도 한다. 특히, 2000년대 후반 다문화담론이 본격화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정착이 정책적으로 중요해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존에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지원하던 단체가 결혼이주여성을 포괄하면서 활동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 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조금씩 병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201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단체에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이 함께 있을 경우 긴장감·불편한 감정이 발생하고 약간의 분리가 나타나기도 한다는(채수홍 2010) 연구가 그 사례이다. 그렇지만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정착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노동자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다르면서도 유사해질 수 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되는 여성 이주노동자와 다른 이슈를 가진다. 하지만 노동자가 되면서 경험하는 문제에서는 상호 연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직 이런 상황에 대한 조명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

(5) 기타활동

신앙생활 지원은 종교단체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선교 자체를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는 이주민선교학교를 운영하며, <빛오름선교교회>는 이주노동자를 “소중한 선교자원”으로 인식한다. <암미선교회 암미다문화센터>는 선교전략으로 상담과 복지문제에 집중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종교기반인 단체가 전체의 47%를 차지함에도 신앙생활 지원이 15.5%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단체가 종교적인 특징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자녀지원은 다문화가정 혹은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학습과 보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장기체류가자 생겨나고 결혼이주여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변화이다. 미용이나 장례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소수에 그친다. 노동조합운동도 활발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2019년 기준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는 2,500명에 미치지 못한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 18). 이 중에서 네팔과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운동 진영은 지원활동의 역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며,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지원단체의 활동을 비판하였지만, 스스로도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기존 사업 이외에도,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특별히 대응해야 하는 일이 생겨났다.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이주노동자센터>(이하 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방역물품과 다국어로 된 방역지침 전달, 코로나 관련 노동의료상담을 제공하며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코로나19타파연대 2020: 59-60). 2020년 2월 말 종교단체 발 코로나19 대확산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대구에 위치한 센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의료지원 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생겨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구입과 지원금 지급 등으로부터 이주노동자가 배제된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사회단체 차원의 일시적 도움만이 아니라 정책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방역지침을 외국어로 공유하고, 위생용품을 확보해 나누어주거나,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 방안을 모색해왔다.

3) 국내외 협력

국내협력에는 25개 단체(16.1%)가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협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연대회의에의 소속 여부이다. 연대회의는 여러

단체가 네트워크 차원에서 연결된 조직체로 공동의 활동을 수행한다. 연결된 여러 단체가 함께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여러 단체들은 연대회의를 구성해 상설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함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2020년 12월 포천에 위치한 농가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를 꾸려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하거나 고용허가제를 규탄한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

이 연구에서 소개된 단체 중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원곡법률사무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지구인의 정류장>,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두드림(문화다양성교원학습공동체)>처럼 평상시 이주노동자와 함께 활동하지 않는 시민사회단체도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러한 사건이 이주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의 차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대회의와 참여단체 현황(중복포함)

연대회의	참여단체 현황
광주전남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밝음공동체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천주교대전교구 이주사목부 대전모이세,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익산노동자의집,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파주살림의집, 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 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실현을위한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방송MWTB, 이주민센터 친구, 김포이웃살이,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방송MWTB, 지구인의 정류장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 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희망영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아시아의 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사목위원회(파주 EXODUS),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이주민연대	아시아의 창, 지구인의 정류장,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친구들,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천안모이세, 한국이주민센터

그렇지만 비율상으로 보면 다수의 단체가 연대회의에 참여하지 않아, 단체 사이의 협력이 몇몇 정해진 단체들의 네트워크에 기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들은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협력활동을 빈번하게 조직하지 않으며, 네트워크가 활동가 개인의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⁸⁾ 활동가가 이전에 활동했던 단체와 비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상설적으로 맺고 있는 것이다. 협력이 체계적으로 기획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활동가들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⁹⁾

국제협력을 하는 단체는 9개(5.8%)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부분은 국제협력이 이주노동자의 국가에 여러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노동문제 차원의 연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적 배경을 가진 단체가 노동운동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드물다. <오산이주노동자센터>(이하 센터)의 대표는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는 산업선교와 민중교회운동을 한 축으로 국제 노동자 연대를 추진해왔다(장창원 2004: 33).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활동이 감지되지 않지만 사안이 있을 경우 협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은 이주와 개발에 관한 세계 포럼에 참여하거나 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은 'Migrant Forum in Asia'와 함께 이주민의 권리옹호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민간교류협회>는

8) 이 부분은 연구자가 다른 연구를 위해서 2021년 9월 중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을 인터뷰하면서 얻은 내용에 기초해서 서술하였다.

9) 이 연구에서 연대회의라는 비교적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내협력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협력이 언제나 연대회의라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밝힌다.

네팔에서 보육원과 평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지원해도, 국제적으로는 이와 다른 차원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와 필리핀에서 공부방이나 인형극을 지원하는 <이주노동희망센터>의 해외활동도 마찬가지다. <다나(젊은부처들)>는 네팔에 교육을 지원하고, 라오스 태양광발전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인권문화연대>도 네팔 이주노동자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미얀마의 학교 운영을 돕는다. <새만금이주민센터>는 해외에 지부를 두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식도동 외국인지원센터>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교육 센터를 운영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간 이주노동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문제에 대한 국제협력보다는 선교라는 종교적인 목적이 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동안 여러 단체의 국제협력은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협의체 활동, 현지의 NGO 설립 지원, 이주노동자 귀환프로그램 등을 주요활동으로 이어왔지만 재정과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유미 2004). 국제협력의 저조한 참여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가 한국 체류 중에 경험하는 문제 해결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력과 재정의 한계가 크다. 국내활동에 집중하는 데도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제적 차원의 협력은 단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운영되거나, 대표가 국제연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간헐적으로 이어지게 된다.

낮은 국제협력 활동은 이주노동자 이슈를 국내적 차원으로 한정하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렇지만, 노동이주는 국내적인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노동의 국제이주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안이다. 노동력 송출국이나 유입국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

라는 점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과 관련된 사안보다는 개발협력의 차원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

4) 지원활동의 변화 양상

2000년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체육대회와 축제 등의 각종 행사 86.4%, 의료 지원 사업 76.5%, 소식지·출판물 제작 65.4%, 연대 사업 64.2%, 컴퓨터 운영 42%,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공동체 지원 35.8%, 국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사업 13.6%, 국제결혼 가족 모임 7.4%의 순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2: 9). 상담활동은 모든 단체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의료, 컴퓨터제공, 임금체불, 법률상담 등의 순으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졌다. 지원활동에 관한 2006년의 연구는 145개 단체 중에서 56개 단체 만이 응답한 결과물이어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에는 제한적이지만 참고해서 분석해볼 수는 있다. 2006년에는 노동·출입국 상담활동과 문제해결 87.3%, 각종행사 지원 81.8%, 의료지원 80%, 한국어교육 78.2%, 국내단체와의 연대 78.2%, 소식지 출판물 제작 70.9%,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 63.6%,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54.5%, 다문화가족 지원 54.5% 등의 순으로 활동이 이어졌다(설동훈·이란주 2006: 34).

〈표 5〉 시기별 주요활동 비교

2000년	2006년	2021년
모든 단체에서 상담 진행	노동·출입국 상담활동을 통한 문제해결(87.3%)	상담(75.5%)
각종 행사(86.4%)	각종 행사 지원(81.8%)	교육(54.2%)
의료 지원 사업(76.5%)	의료지원(80%)	의료지원(42%)
소식지·출판물 제작(65.4%)	한국어교육(78.2%)	문화활동 지원(36.1%)
연대 사업(64.2%)	국내단체와의 연대(78.2%)	쉽터운영(33.5%)
쉽터 운영(42%)	소식지 출판물 제작(70.9%)	여성지원(이주노동자, 결혼이주)(27.7%)
각국의 외국인노동자 공동체 지원(35.8%)	외국인근로자 공동체 지원(63.6%)	국내협력(16.1%)
국내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끌어내는 사업(13.6%)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54.5%)	국가별 공동체 지원(15.5%)
국제결혼 가족 모임(7.4%)	다문화가족 지원(54.5%)	신앙생활 및 선교(15.5%)
기타 사업(30.9%)	컴퓨터 교육(50.9%)	자녀지원(9%)
-	노동법 산업안전 교육(49.1%)	국제협력(5.8%)
-	쉽터·피난처 운영(49.1%)	기타(이미용 봉사, 장례)(5.2%)
-	연구사업(43.6%)	법률지원(3.2%)
-	선교·포교활동(38.2%)	미디어 활동(2.6%)
-	건강·성 교육(38.2%)	노동조합(1.9%)
-	귀환 후 재정착 프로그램(34.5%)	-
-	해외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와 연대(25.5%)	-
-	한국인과 외국인 자매결연(21.8%)	-
-	외국인 아동 교육(탁아소 등) 지원(20%)	-
-	국내 노동조합의 지원 유치(9.1%)	-

우선, 상담 활동은 세 시기를 거쳐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받을만한 사안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시민사회단체 이외에 상담을 받을만한 또 다른 창구가 생겼거나, 활발해진 소셜미디어 활용과 이주노동자 사이의 연결로 가능해진 정보의 공유가 상담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 지원 기관이 설립되어 상담활동을 수행한 것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 행사는 2000년과 2006년에 비슷한 비율로 빈번하게 수행하는 활동으로 조사되었지만 2021년에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문화활동 지원에 체육대회나 각국의 음식 나눔 행사 등과 같은 자체적인 축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율상으로는 보면 행사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지만, 이 의미를 면밀히 분석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분명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문화활동 지원에는 미디어 활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과 2006년에는 이러한 활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2006년은 미디어 활동을 하는 단체가 설립된 이후여서 응답을 하지 않았거나 기타 항목으로 응답했을 수도 있지만, 제시된 자료상으로는 이러한 차이가 유추 가능하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종류의 문화활동이 기획되기 시작한 것이다.

의료지원은 2000년과 2006년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감소하였다. 2021년의 자료가 문헌에만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고, 2006년의 자료가 일부 단체의 응답이라는 제약이 있어 그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증가하였고, 2019년부터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로 의료여건이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직장가입이 어려운 제조업 이외의 영세 업종에서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내국인보다 높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해야 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지원이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료여건이 개선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높은 현실의 벽은 시민사회단체의 의료지원 감소를 의료여건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해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활동이 감소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추해볼 수는 있다.

교육은 세 시기에 걸쳐서 모두 주요한 활동으로 나타난다. <표 5>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2000년에는 대부분의 단체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한글 교육이 85.5%, 종교 교육이 84.3%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설동훈 2002: 10). 종교 교육에는 전도와 포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단체의 구성을 보면 시민운동단체 5개, 종교계 79개, 전문서비스(의료봉사 및 법률서비스) 단체 6개로 종교계가 압도적인 비율인 87.8%를 차지하였다(Ibid: 4). 2021년 기준으로는 51%의 단체가 종교계에 해당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종교계 외 단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한 상황은 주요활동 중에서 신앙생활 및 선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면으로 부각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쉼터 운영도 세 시기에 걸쳐 주요 활동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려는 단체의 활동이 꾸준하게 이루어져온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활동은 이주노동자가 낯선 한국에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외에도, 2000년과 2006년에는 연대사업과 해외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와의 연대 활동 비중이 높지만, 2021년에는 국내 및 국제협력이 저조한 것도 눈여겨볼만 하다. 연대사업과 해외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와의 연대 활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서 세 시기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연대회의에 포함된 단체만을 대상으로 보다 가시적인 국내협력을 주로 다루었다면, 이전에는 단체

들이 저마다 다른 연대를 생각하며 설문지에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 활동가들은 연대회의에 속하지 않더라도 오랜 경험으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2000년과 2006년의 조사에서는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반한 비공식적인 활동을 응답에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문헌에 기초한 2021년의 자료에서 연대가 낮게 나타나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2000년과 2006년의 자료에서 연대가 높게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지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내 및 국제협력 활동이 공식적인 연대의 표명 보다는 활동가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밖에 2021년 기준으로 여성지원 활동이 꾸준히 진행된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 2000년에는 낮은 비율로 국제결혼 가족 모임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에, 2006년에는 이미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 아동 교육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1년에도 자녀지원 활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지원이 중요한 활동영역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이 비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노동조합 관련 활동은 2000년과 2006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2021년 자료는 단체 중심의 노동조합 연계를 포함하기 보다는, 노동조합 활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다. 다만, 2000년에 노동조합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활동으로 간주되었고, 2006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노동조합과 그 외 단체 사이의 협력이 주요활동으로 인식되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2021년의 자료에서는 그 시도를 찾아볼 수 없다. 2021년의 자료가 문헌에만 기초한 것이라는 한계로 인해서 구체적인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 교육, 의료지원, 쉼터운영, 국내 및 국제협력은 모든 시기를 거쳐 나타나고 있다. 다만 여러 항목들이 조사당시의 설계방식에 따라서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대략적인 흐

름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6년의 조사가 활동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있어 보다 간단하게 활동 항목을 구성한 이전과 이후 시기와 비교하는 것에 제약이 따랐다. 이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큰 줄기의 변화양상이라도 파악해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5. 결론: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함의

지금까지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특징을 다소 개략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기반이 된 자료는 모두 단체의 홈페이지나 SNS 계정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 근거를 둔다. 그렇지만 홈페이지가 있어도 열리지 않거나, 단체에서 최신 자료를 업데이트 하지 않기도 했다. 신문기사 등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해보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도 활동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어려웠다. 많은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듯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특징은 다소 포괄적으로 그 경향성을 확인하는데 그치고 말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분야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상담, 교육, 의료지원, 심터운영은 1992-2000년 사이의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조사한 연구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설동훈 2003a: 90-91).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세 가지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동자가 전국에 산발적

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곳곳에서 활약하는 것은 유의미하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이 비슷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계 협력을 통한 역할분담과 상호보완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안산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집중됨에 따라 다수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경우 사업이 겹치면서 단체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는 비단 최근의 문제만이 아니다(장원봉 2000: 177-178). 안산과 같이 이주노동자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 중복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슈였으며, 이로 인해 단체 간의 연대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단체와 유사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도 첨예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한 이유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설립 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이래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설립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기존에 시민사회단체가 수행했던 활동과 유사한 사업을 기획하면서 단체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가 지자체 기관을 위탁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민관 파트너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충북 음성군에서 발생한 시민사회단체와 음성군 산하의 <음성군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사이의 갈등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보여준다.¹⁰⁾ 기존에 음성군에서 15년 가까이 활동해온 비영리민간단체 <음성외국인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가 지원센터의 비슷한 명칭,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도움센터는 지원센터를 위탁한 사회적 기업의 역량, 지자체 지원금으로 위탁기관의 홍보물을 제

10) 고병택. "음성외국인도움센터-지원센터 갈등 '폭발'... 어디부터 잘못 났나?" 「충북인뉴스」. 2020. 6. 16.

작한 점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상의 두 가지 함의는 결국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도 연결된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를 가진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수행해야하는 활동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역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활동을 유관 단체와 함께 협의하고 분담함으로써 특정 활동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국내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할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이러한 역할 조정 과정에서 병행된다면 단체 사이의, 그리고 단체와 중앙 및 지방정부 기관 사이의 거버넌스가 교차하면서 협의의 장을 마련할 가능성이 생긴다. 단체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련 주체들이 각자의 활동과 사업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상대적으로 가시화된 국내협력에 비해서 국제협력이 저조하다. 현재 시민사회단체는 국제협력 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네팔노총과 함께 이주노동자 활동에 협력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합의해 국제연대의 첫걸음을 떤 적이 있다(임월산 2011). 국제적 노동운동 연대로서 유의미한 시도였지만, 여전히 국제연대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정영섭 2017). 이주노동자 출신 국가에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구호를 지원하며, 학교설립을 도와주는 활동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주노동과 관련된 국제연대가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넷째,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세대교체의 흐름이 미세하게나마 감지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미진했던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분화라는 점에서 눈여겨볼만하다. 2020년 설립된 <이주인권콘텐츠랩 액트> 및

(ACT-IT)>의 대표는 <이주노동자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연대활동으로 인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활동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밝혔다(이주노동희망센터 2021: 93-94). 대표는 집회-기자회견의 틀이 대중으로부터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미디어운정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래된 노동조합의 조직·연대 방식의 운동을 아쉬워하는 청년세대의 등장은 30년의 역사를 가진 이주노동자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찰나의 지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현황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지만, 연구방법상의 제한으로 특징을 포괄적으로 개관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러 활동상을 문헌으로 확인하고 활동가 인터뷰 자료를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느낀 시민사회단체의 다양성은 이들이 가진 미래 과제의 복잡함과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증가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에 직면하였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거버넌스 연구도 향후의 과제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변화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가 유입되고 지원활동이 본격화된 지난 30년 동안 변화를 경험한 주체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만이 아니다. 본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국에 입국하고 노동을 이어가면서 삶을 영위하는 이주노동자들 역시 이전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세대도 달라졌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도 다양해졌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역동은 이러한 요인 속에서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그 다층적인 특징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잡함을 탐색하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2021년 10월 4일 접수, 11월 1일 심사완료, 11월 17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학술자료]

- 고유미. 2004.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의 국제협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그레이, 케빈. 2004.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서 한국의 이주노동자들." 『아세아연구』 . 47(2): 97-128.
- 김현주. 2005. "성서공단노동조합 이주사업부 사례." 2005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정기심포지움: 이주노동자 운동의 미래, 그리고 진정한 연대를 향한 모색(2005.11.10.) 토론자료. pp.81-84.
- 박석운. 2001. "한국내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네트워크현황과 연대방안의 모색."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 (2001.12.12.~14.) 발표자료.
-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의 발전, 1990~2002년: 쟁점과 과제." 제11차 시민사회포럼. <https://archives.v1365.or.kr/items/show/3148>, 검색일자: 2021년 5월 12일.
- 설동훈. 2003a.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1992-2002년."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 문화과학사. pp.76-99.
- 설동훈. 2003b.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3년." 『진보평론』 17: 246-269.
- 이란주 노대명. 2000. "세계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인권: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을 찾아서." 『황해문화』 29: 295-321.
- 이상지. 2014. "이주민관련 종교NGO들의 지역사회 내 역학관계 연구-천주교, 개신교,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옥. 2005.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변화-고용허가제 도입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 2003.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관련 NGO."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pp.323-352.
- 장창원. 2004. "풀뿌리 노동자 연대 APWSL 사례를 중심으로 본 노동자 국제연대활동 소고." 「2004 하반기 국제연대 활동가 포럼」 (10.22/민주노총) 자료, pp. 29-34.
- 전제성. 2006. "한국 노동운동의 동아시아연대활동 현황과 평가." 『2006 동아시아 연대운동단체 백서』. 서남포럼. pp. 59-72.
- 정성신. 2012. "미등록 이주노동자에서 이주민 미디어 활동가로: MWTV 미디어 활동가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18(1): 35-78.
- 채수홍. 2010. "교회활동을 통해 본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배제와 통합: 안양 A교회와 분당 B교회의 사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pp. 207-253.
- 최지연. 2004.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대전 지역의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도현. 2010.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이주노동자들의 권익과 시민공동체』. 백산서당. pp. 101-156.

[보고서]

- 설동훈·이란주. 2006. 『외국인근로자지원사업(기관) 제도개선 및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 이주노동희망센터. 2021. 『이주민? 노동자? 이주노동NGO?-이주노동

NGO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조사연구』

- 우춘희. 2020.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이동의 제한이 이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 2020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공모형 연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9. 「2019 이주노동자 조직화 연속 워크숍」(5.16.) 자료.
- 코로나19타파연대. 2020. 『2020 NPO참여예산제 결과 자료집: 시민사회 영역별 코로나19 대응활동 연구조사 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
- 한국다문화학회. 2010. 『한국 다문화정책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역량강화 방안』

[Web site 및 기사자료]

경기도청 웹사이트 <https://www.gg.go.kr/>

고용노동부 웹사이트 <http://www.moel.go.kr/index.do>

통계청 웹사이트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강정원. “전주 삼천동에 ‘외국인노동자 쉼터’ 들어선다.” 「전북일보」. 2021. 7. 13.

고병택. “음성외국인도움센터 지원센터 갈등 ‘폭발’...어디부터 잘못 됐나?” 「충북인뉴스」. 2020. 6. 16.

월간리쿠르트. 2021/3/12. “이주민에 대한 편견을 지우고 존재를 조명하는 ‘액트-잇(ACT-IT)’.”

임월산. 2011. “민주노총-네팔노총의 활동협력과 2011년 이주노동자 조직화 방안: 이주노동자운동을 위한 새로운 전진.” <사회운동> 2011.1-2.98호.

정영섭. 2017. “네팔로 돌아간 이주노조 활동가들의 근황: 네팔이주노

동자연대센터 방문 후기.” <오늘보다> 2017/05 제28호.

하남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https://hanam.familynet.or.kr/center/
index.do](https://hanam.familynet.or.kr/center/index.do)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s:// npas.mois.go.kr/](https://npas.mois.go.kr/)

〈부록〉 시민사회단체 현황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1. 서울(29)		
공익법센터 어필	2011	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04	재단법인
국제민간교류협회 (前희년선교회)	2003 (1991)	사단법인
노동건강연대	2001	
다나(젊은부처들)	2005	비영리 민간단체
라파엘클리닉	1997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대한불교조계종)	2008	
서울외국인근로자선교회(나섬공동체)	1996 (2012)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2014) 운영]	1997	사단법인
선한의료포럼	2008	
용산나눔의집	2003	
원불교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200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前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1995	비영리민간 단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노동인권회관(부설)]	1992	사단법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000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이주노동자의 벗	2003	
이주노동희망센터	2010	사단법인
이주민방송MWTV	2004	
이주민센터 친구	2012	비영리 민간단체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감동)	2014	비영리 민간단체
이주인권콘텐츠랩 액트.잇(ACT-IT)	2020	비영리 스타트업
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운영]	2000	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2	사단법인
푸른사람들(前푸른시민연대)	1994	사단법인
프리메이드	2008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	2005	사단법인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1999	사단법인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2001	사단법인
AMC Factory	2011	
2. 경기·인천(64)		
가산이주노동자센터		
갈릴래아 외국인 노동자 사목센터(천주교수원교구)		
까리따사이주민화성센터(천주교수원교구)		
곤지암외국인 교육지원센터		
광성외국인센터		
광주엠마우스 신앙공동체	2007	
광주외국인근로자및다문화가족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의집)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이주민나눔센터		
광주이주사목센터		
광주마구스비전센터(만나교회)		
국경없는마을 김포이주민센터		사단법인
국경없는친구들		사단법인
국제외국인센터	2006	비영리민간 단체
김포이웃살이	2005	
김포마하이주민센터	2005	
모두를위한이주민권문화센터	2018	사단법인
용인이주노동자센터	2004	
발안엠마우스 신앙공동체	2006	
부천시주노동복지센터	2001	
부천시주민지원센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1995	사단법인
빛오름선교교회	2006	
사단법인 올프렌즈	2010	사단법인
새중앙교회	1983	사단법인
세상의빛 이주민센터(세상의빛선교교회)	2000	
성남이주민센터		
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1994	비영리 민간단체
수원엠마우스 신앙공동체(수원엠마우스이주민센터)	1995	
수원이주민센터	2000	비영리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수원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단체
시흥엠마우스 신앙공동체	2011	
아시아의 창	1993	사단법인
아시아의 친구들	2002	
아시아인권문화연대	2000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1994	
암미선교회/암미다문화센터	1983	
안산이주민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1994	사단법인
안양엠마우스 신앙공동체(안양엠마우스센터)	2008	
엘림외국인지원센터	1993	사단법인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온누리M센터	2005	
원곡법률사무소		
월드미션센터		
이주민연대 살롬의집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사단법인
임마누엘교회(임마누엘다문화가족센터)		
지구인의정류장	2009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구리EXODUS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의정부EXODUS	2000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EXODUS	2003	
천주교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2	
타이소망교회(인천)		
파로스선교회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살롬의집		
평택엠마우스 신앙공동체	2000	
평택외국인복지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살롬의 집	2002	
포천송우리문화센터(외국인근로자교회)		
포천이주노동자센터(평강교회 부설)		
한국이주노동재단	1998	사단법인
한국이주인권센터	2001	
한국CLC부설 이주노동자인권센터	2002	
함께하는 이웃	2013	사단법인
해피피플 경기남부지부	2017	사단법인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2007	비영리 민간단체
3. 광주 전라(20)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광주이주민사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목포이주민사무센터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순천이주민사무센터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여수이주민사무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비영리 민간단체
광주민중의집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광주 아시아밝음공동체	2009	사단법인
광주외국인복지센터	2009	사단법인
광주이주민건강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2005	
광주이주민지원센터		비영리 민간단체
군산새만금이주민센터	2011	
군산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2009	비영리민간 단체
군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쉼터	2012	비영리법인
순천로드월드비전		
순천이주민지원센터	2009	
여수이주민센터(여수외국인노동자센터)		
오식도동의국인지원센터	2012	비영리 민간단체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2001	사단법인
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1996	
익산성요셉노동자의집	1983	비영리 민간단체
4. 대전·충청(15)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외국인종합복지관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05	사단법인
대전이주민과함께하는모임 (대전외국인이주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		
아산이주노동자(지원)센터	2001	
음성군외국인근로자(인력)상담지원센터	2017	비영리 민간단체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음성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014	비영리 민간단체
음성국외국인도움센터	2005	비영리 민간단체
천주교대전교구이주사목부 대전모이세	2003	
천주교대전교구이주사목부 천안모이세	2004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충북이주민노동자지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1996	비영리 민간단체
충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2015	비영리 민간단체
홍성이주민센터(새홍성교회)	2003	
희망봉사단	2007	사단법인
IFC국제친교센터	2003	비영리 민간단체
5. 대구·경북(12)		
경산이주노동자센터	2007	
경주이주노동자센터		
경주외국인센터	2011	사단법인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꿈을이루는사람들 마하벗다센터	2000	사단법인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구구민교회)	1998	
대구이주민선교센터(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2003	
성서공단노동조합 성서이주노동자센터	2004	
이주와가치	2012	
제일외국인상담센터(구미제일교회)	1998	비영리 민간단체
희망웅상		사단법인
6. 부산·울산·경남(11)		
가톨릭노동문제상담소·가톨릭이주노동자센터	2011	
경남이주노동복지센터		
경남이주민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1998	사단법인
김해이주민지원센터	2007	
삼산거주외국인지원협회	2006	사단법인
울산이주민센터	2008	비영리 민간단체
이주민과함께	1996	사단법인

단체명	설립 년도	단체유형
(前)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부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 아시아평화인권연대(2003)와 통합(2009) 운영]		
이주와 인권연구소	2005	
진주사랑의집	2001	
천주교마산교구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창원이주민센터		
한국이주민의집(前김해이주민의집)	2013	사단법인
함께하는세상(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2020 (1997)	사단법인
7. 강원(1)		
함께하는공동체	2003	사단법인
8. 제주(3)		
서귀포이주민센터(제주외국인근로자서귀포센터)	2005	사단법인
제주이주민센터	2002	비영리 민간단체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나오미)		
총 155개 단체		

Abstract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Support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s in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im, Joo-you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undertake support activities for migrant workers. The study will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as of 2021 and reveal the implications. There are a total of 155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arrying out support activities for foreign migrant workers. Th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time of their foundation and main actors of operation, major activitie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date of the civic groups was examined to understand how they changed with the rise of intervention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local governments from the 1990s to the 2020s. Religious groups and their influence within the main actors of operation were also identified. Major activities were classified as counseling and education, medical support and the provision of shelters, cultural activities and community support for each country of origin, marriage migrant women support activities, and other activities. Whil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cooperated domestically participated in solidarity meetings, an examination of international

* Research Fellow, Jeonbuk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ooperation revealed the intentions of and activities that the minority civic groups are engaged in.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four implications were drawn to show the current state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support migrant workers.

Keywords: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 Support Activit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Korean Civil Society